정신문화연구 2002 여름호 제25권 제2호(통권 87호) pp. 149~176

研究論文

일제 강점기 조선 천주교회의 정체성

조 현 범*

Ⅰ. 서론
Ⅱ. 정치적 의례의 실천
Ⅲ. 동양 문화에 대한 재인식
Ⅳ. 순교자 현양 운동과 聖戰의 촉구
Ⅴ. 결론

Ⅰ. 서론

조선 천주교회는 소위 박해 시대와 개항기의 소용돌이를 거친 연후에 일제 시대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인 안정기를 맞이했다. 이에 사회적 공신력의 획득과 종교 내적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노력이 무산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회는 총독부의 조선 지배에 철저히 순응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천주교회의 태도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국가 권력과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조선 천주교회에서는 각종 천주교 전례 과정에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끼워 넣음으로써 정치적인 함

* 한신대학교 강사, 종교학

의를 담은 의례들을 실천했다. 또한 신사 참배는 종교 의례가 아닌 국민 의식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총독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전체 교회 차원에서 이를 허용했다.

한편 조선 천주교회는 교회 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1937년부터 순교자 현양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조선 천주교회가 순교자의 피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인식은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선교사들에 의해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8대 조선대목구장 뮈텔(Mutel)의 주교 문장에 들어 있는 '피어라 순교의 꽃이여'(Florete flores martyrum)라는 표어로 이어졌다. 하지만 순교자의 전통이 조선 천주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현양 운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일제 말엽의 순교자 현양 운동은 순수하게 종교적인 의미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시 동원 체제라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전쟁 협력의 굴절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천주교의 대외적 및 대내적 활동 양상은 같은 기독교에 속한 개신교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특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모두 신사 참배를 용인하고 국방 헌금을 헌납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점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당시 개신교에서는 1920년대부터 선교사들의 백인 우월주의적 태도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반선교사 운동이 점차 동양적 기독교 운동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의 개신교 목사들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펼친 이 동양적 기독교 운동은 이른바 일본 정신과 개신교 사상을 결합시키자는 주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것은 교리의 재해석을 통해 사상적인 측면에서 황민화 이데올로기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천주교는 사상이나 교리의 재해석이 아니라 의례적 실천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시책과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紀元節, 天長節 등 일제의 기념일에 경축 미사를 올리고,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미사나 전몰 군인을 위로하는 미사를 수시로 개최했으며,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 천주교회의 사회적 존재 양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다. 특히 신사 참배 허용이나 조상 제사 금지의 완화와 같은 문제에 대

해서는 그 배경과 전개 과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 하나 깊이 천착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어떤 맥락에서 출현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제시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글은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당시 조선 천주교회의 특징적인 양상이던 정치적인 함의를 가진 의례들의 실천과 동양 의례 문화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순교자 현양 운동 등을 정체성 확립이라는 조선 천주교회의 당면 과제와 결부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Ⅱ. 정치적 의례의 실천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는 조선 천주교회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당시 천주교회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거행한 각종 정치적 의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의 전쟁 승리를 비는 각종 기원 미사와, 전몰 군인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 미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정치적 의례들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조선 내에서 전시 동원 체제가 수립되면서 한층 증가했다. 말하자면 '전시 비상 시국' 타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조선 천주교회의 모습이 이때부터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1]

본래 위령 미사와 기원 미사는 천주교회의 전통적인 전례 규칙상 특별 미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교구의 주교와 주교 회의의 승인에 의해 엄격히 규정된 방식으로 행해진다.[2] 그러므로 위령 미사는 대개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1) 문규현, 『한국천주교회사 I 』(빛두레, 1994), 184쪽.

2) 1936년 원산에서 덕원수도원을 운영하고 있던 베네딕도회에서 간행한 『彌撒經本』에서는 이 기원 미사와 위령 미사를 헌원 미사와 연미사라 칭하면서 그 실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먼저 헌원 미사에 대해서, "瞻禮(교회력에 규정된 축일을 말함)도 아니요 본미사도 없는 날에는 헌원 미사를 드릴 수 있으니 이는 특별한 간원이나 혹은 단체나 미사를 청한 자나 본사제의 원의로 할 수 있나니라.…헌원 미사에는 장엄 헌원 미사가 있나니 이는 오직 특별한 일이 있는 때에 주교의 동의를 얻어 드릴 수 있으며 이런 미사에는 영복경과 신경과 축문 하나가 있나니라. 사사 헌원 미사는 정한 미사가 없는 모든 날에 드릴 수 있으니 이에는 영복경과 신경은 없고 셋이나 혹 셋 이상의 축문이 있나니라.(『彌撒經本』, 40~41쪽)" 또한 연미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장례날이 최상층 첨례가 아니면 언제던지 대례 연미사를 드릴 수 있나니라. 이런 미사에는 축

신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 미사로 거행되거나, 또는 고인의 기일에 추도의 예식으로 올리는 것이 상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원 미사 역시 해당 교구장이나 주교 회의가 선정한 연중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청원을 위해 올리는 것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 천주교의 의례 자체가 국가 예식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해당 국가의 천주교회가 위정자나 국가를 위해 기원 미사를 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조선 천주교회는 이러한 천주교회의 일반적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아울러 일제의 조선 지배 정책에 가장 잘 순응하는 모범적인 종교로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위에서 말한 각종 의례를 거행한 것이다.

1. 기록을 통해 본 위령 미사와 기원 미사

전몰 군인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 미사가 언제 처음으로 거행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적인 천주교 출판물로서 격주간으로 발행되던『경향잡지』의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3] 1937년 9월 30일자『경향잡지』에 따르면 같은 해 9월 9일에 평양부 신리교회에서 중일전쟁 당시 사망한 일본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 미사를 거행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 하나뿐이요 부속가는 창할 것이다. 2. 사후 3일, 7일, 30일 및 기일에는 주일이나 최상층 첨례나 상층 첨례나 특별한 날 즉 망첨례 날이나 8부첨례 날 외에는 대례 연미사를 드릴 수 있나니라. 그런 미사에는 축문은 하나요 부속가도 창할 것이니라(위의 책, 41~42쪽)."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천주교회에서 기원 미사와 위령 미사의 거행은 본당 사제가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엄격히 규정된 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3) 『경향잡지』는 본래 조선 천주교회에서 발행한 최초의 정기 간행물인『경향신문』의 부록이었던『보감』의 후신이다. 일제의 조선 병탄 이후 순수하게 종교적인 성향을 지닌 신문의 발행만을 강요하던 조선총독부에 의해『경향신문』은 1910년 12월 30일자로 폐간되었다. 그러자 조선 천주교회에서는 1911년 1월 15일부터『경향신문』의 부록이던『보감』을 격주간의 종교 잡지인『경향잡지』로 변경해 계속 발행했다. 일제 시대 전 기간 동안 꾸준히 발행되었던『경향잡지』는 일제 패망 직전인 1945년 5월 15일에 제39권 제976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복간되었다. 특히 1959년 7월 1일부터는 이 잡지의 발행권이 천주교 서울교구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천주교계의 대표적인 기관지로 인식되었다. 창간 이래 순수한 종교 잡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던『경향잡지』는 특별히 일제 시대 조선 천주교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1권』(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349~352쪽

> 평양부외 신리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에 각 관공서원과 군부대표 2 백여 명에게 청첩을 보내고 허다한 교우들이 열심으로 참례하는 중 교구장대리 부신부께서 전장에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한 병사들의 영혼을 위하여 미사성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당일에 많이 참석한 각 관공서원들은 가톨릭 교회가 망자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국가에 대한 열성을 충분히 깨달았다 하며 미사 은혜를 받은 병사들의 영혼은 이날 큰 위로를 얻었으리라 한다.[4]

또한, 같은 해 10 월 2 일에는 황해도 안악 읍내교회에서도 감목대리 김신부의 집전으로 大禮彌撒를 지냈으며, 이와 더불어 군청과 경찰서에서 연합으로 개최하는 시국 인식 강연회도 열렸다. 그리고 10 월 10 일 일요일에는 황해도 사리원교회에서 오전 9시에 '동양의 평화'를 위하고 '전사한 황군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미사를 거행했다.[5] 1937 년부터 1945 년까지 조선 천주교회가 거행한 전몰 군인 위령 미사에 관한 기록을 『경향잡지』에서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변 1주년 7월 7일에 각 성당에서 미사성제」 (1938. 7. 15)
> 「西田 율리오君의 성대한 장례식」 (1939. 1. 15)
> 「今 7월 7일은 사변 2주년!」 (1939. 6. 30)
> 「총후후원강화주간」 (1939. 10. 15)
> 「국민총력: 매월제일주일을 교회애국일로」 (1941. 2. 15)
> 「도꾸나가 덕영 토마스 병장의 위령 사도식」 (1945. 1. 15)
> 「해주에 위령 미사성제」 (1945. 3. 15)

한편 전몰 일본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 미사 외에도, 일제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애국 행사로서 일본군의 전쟁 승리와 국가 융성 그리고 동양 평화를 기원하는 기원 미사가 있었다. 京城 明治町大聖堂[6]에서는 1937년 8월 15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군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

4) 「평양부외 신리교회 위령미사성제」, 『경향잡지』, 1937년 9월 30일
5) 「황해도 안악읍내교회에 묵상회와 위령미사성제」, 『경향잡지』, 1937년 10월 30일
6) 현재의 명동성당을 말한다.

나온다. 특히 11월 1일에 열린 행사는 경성교구 내 4개 본당 연합으로 치렀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성 명치정대성당에서는 지난 8월 15일에도 벌써 皇軍武運長久祈願祭를 지냈는데 지난 11월 1일에는 시내 4본당 연합으로 제2차 기원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오전 열시에 원주교께서 대례미사를 거행하셨는데 조선군 사령관 대리, 정무총감 대리, 중추원 참의 등 시내 高官名士들 1백여 명도 열심으로 미사에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 團旗를 들고 참석한 시내 각 본당 각 단체 대표들과 일반 교우들이 대성당 내에 가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날 경성 중앙방송국에서는 마이크를 대성당 내에 이동해서 대례미사의 실황을 全鮮에 중계 방송하였다 한다.[7]

또한 1938년 2월 13일 목표 천주교회도 '국가의 융성을 위한 미사 성제'를 올렸던 것으로 되어 있다.[8] 그 외에 『경향잡지』에 소개된, 소위 애국행사로 미사를 거행한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봉천조선인교회에서도 황국을 위하여 미사성제」(1938. 4. 15.)
「영등포에 종축성과 국가를 위한 미사성제」(1938. 6. 15.)
「경성 백동교회에 평화 기원제와 견진성사」(1938. 7. 15.)
「성모승천대첨례에 가톨릭의 총후 열성」(1938. 8. 30.)
「비상시국 하의 성탄」(1939. 1. 15.)
「일본정신 발양주간 실시에 관한 건」(1939. 1. 31.)
「각 교회에 사변 3주년」(1940. 7. 15.)

그러면 이와 같이 조선 천주교회가 당시 일제의 시책에 부응해 거행한 각종 위령 및 기원 미사와 애국 행사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또는 이것이 당시 조선 천주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을까?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을 기점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패전한 1945년까지의 기록을 모두 확

7) 「경성4교회 연합주최로 국가평화를 위한 기원미사성제」, 『경향잡지』, 1937년 11월 15일.
8) 「목포에 국가를 위한 미사성제」, 『경향잡지』, 1938년 4월 15일.

인할 수는 없지만, 1937년부터 1939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당시 경성교구의 통계는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37년 7월 7일부터 1939년 12월 31일까지 경성교구 49지방에서 동양의 평화, 일본군의 전쟁 승리 기원, 전몰 장병의 위령 등을 위한 각종 미사 29,622회, 같은 목적으로 행한 기도 55,452회, 국방헌금 3,624원 23전, 일선 장병 위문금 932원 4전, 병기 헌납 보조금 422원 39전, 일선에 보내는 위문 주머니 691대, 시국을 위한 강연회와 좌담회 11,592회, 출정 장병의 가족 위문 151회, 부상 장병 위문 37회, 기타 각종 행사 165회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9] 그리고 이러한 실적은 "어느 때나 진중한 천주교회는 비록 겉으로 떠들어 남의 이목을 끄는 일은 별로 아니할지라도 자기의 당면한 책임은 얼마나 은근하고 충실하게 꾸준히 계속 시행하여 나가는지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위에서 말한 전몰 일본군 위령 미사와 전쟁 승리 기원 미사, 그리고 각종 애국 행사가 일제의 침략 전쟁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종교 의례적 실천이었으며, 또 이것이 당시 조선 천주교회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한편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1944년 12월 8일 이른바 '종교보국회'가 결성되자, 이의 결의로 조선의 각 종교 단체가 모두 1945년 1월 10일에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전몰 장병 위령제를 거행했다는 기록이 보인다는 점이다.[10] 자세한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불교, 神道, 개신교, 천주교가 각각 고유한 의례 형식대로 위령식을 올렸다고 한다. 개신교 각 교파의 경우에는 京城府의 승동예배당에 모두 모여서 함께 위령식을 올렸다. 그리고 조선 천주교회는 명동대성당에서 노기남 주교의 집전으로 성체 강복식과 사도 예절을 거행했다.

2. 정치적 의례의 형식과 이데올로기적 기능

이상에서 『경향잡지』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 전몰 군인 위령 미사와 전쟁 승리 기원 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했을까?

9) 「경성교구 애국행사 성적」, 『경향잡지』 1940년 3월 15일.
10) 「전몰 장병 위령제」, 『경향잡지』, 1945년 1월 15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미사, 특히 위령 미사가 천주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 근거에서 행해진 것이었지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천주교회에서는 영세를 받고 죽은 이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생전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 머무르는 煉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연옥의 영혼을 위해 지상의 교회가 위령 미사를 올리는 것이 효력이 있다는 점을 권장해 왔다. 그렇다면 전몰 군인을 위한 위령 미사가 이 煉靈, 즉 연옥의 영혼을 위해 바치는 위령 미사로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상황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전몰 군인 위령 미사와 전쟁 승리 기원 미사의 형식을 밝히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유럽의 천주교회에서 연옥(le purgatoire)에 대한 신앙이 생겨난 것은 대략 11, 12세기 무렵의 일이다.[11] 그리고 교황에 의해 교의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254년 이노첸트 4세가 보낸 공문에서였다. 이 공문에서 당시 연옥의 존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인(정교회)들에게 교황은 동의를 요구하면서 교회의 煉禱가 연옥의 영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12] 한편 연옥의 교의가 탄생하던 시기와 비슷한 때인 11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클뤼니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萬聖節 다음날인 11월 2일을 追思已亡節로 정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의례를 행했다.[13]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베푸는 이 망자추념일의 제정은 이후 연옥의 교리가 정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연옥과 교회의 연도가 천주교의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된 것은 14세기 중반과 17세기 초 사이로서, 1439년의 피렌체 공의회와 1562년의 트렌트 공의회에서였으며, 19세기까지도 유럽의 천주교회에서 크게 유행했다.[14]

그러면 일제 말엽의 조선 천주교회와 관련해 볼 때 어떠한가? 당시 식민지 조선의 천주교회에서도 연옥에 대한 신앙은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경향잡지』의 한 사설은 煉靈聖月인 11월을 앞두고 "연령 구제에 노력" 하는 것은 "천주의 성의이고 성교회의 갈망이며 연령들의 애원하는 바로서" 마땅히 특별한

11) 필립 아리에스, 『죽음 앞에 선 인간』(동문선, 1997), 319쪽.
12) 자크 르 고프, 『연옥의 탄생』(문학과지성사, 1995), 543쪽.
13) 위의 책, 251~253쪽.
14) 위의 책, 680쪽.

미사를 올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15] 그리고 평양 교구에서는 한식과 추석에 看山이나 省墓가는 것을 추사이망절에 가기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16] 또한 회원의 사망시와 추사이망절에 특별한 미사를 봉헌할 목적으로 煉靈會를 조직해 기금을 적립한 경우도 발견된다.[17] 이로 보아 식민지 시기 조선 천주교회에서는 전몰 군인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권고에 따라 죽은 부모나 형제, 친구를 위한 위령 미사를 자주 행했다. 그러므로 당시 행해진 전몰 군인 위령 미사 역시 보통의 위령 미사에 준해 행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8]

그러면 전몰 군인 위령 미사와 전쟁 승리 기원 미사가 어떤 의례 절차를 거쳐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천주교의 미사 전례는 교황을 최고 수장으로 하는 천주교회의 교계 제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된 전례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제 시대 조선 천주교회 미사의 형식과 절차가 일반 미사 전례와 크게 다른 모습을 띠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별 미사라 할 수 있는 위령 미사나 기원 미사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진행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미사에 참례한 신자나 미사를 집례한 신부 가운데 현재 생존한 이들로부터 증언을 듣는 것이 유일할 것이다. 다만 당시 미사에 대한 규정을 담은 『聖敎禮規』나 미사에서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문을 한글로 번역해 싣고 있는 『彌撒經本』 등에 나타난

15) 「연령구제에 노력하자」, 『경향잡지』, 1936년 10월 31일

16) 「연령성월과 가톨릭운동」, 『가톨릭 연구』, 1934년 11월호. 이 제안은 1934년 8월 조직된 '평양 교구 가톨릭 운동 연맹'의 중앙부가 제안한 것이었다.

17) 「용소막에 연령회」, 『경향잡지』, 1936년 5월 31일.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연령회는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용암리본당에 회를 둔 것으로, 1929년에 조직되어 1936년 현재 약 200명을 회원으로 하고 근 10두락의 부동산과 상당한 현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18) 그런데 앞에서 본 전몰 군인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 미사 가운데 西田 율리오라는 인물의 장례식과 도꾸나가-덕영 토마스라는 인물의 위령 사도식은 분명히 천주교도로서 영세를 받은 자의 위령 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율리오와 토마스라는 세례명이 이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그 외의 위령 미사는 모두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불특정 군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불특정 다수의 전몰 군인을 위한 위령 미사는 과연 어떤 교리를 근거로 행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천주교회의 연옥 교리와 관련된 것이었는지를 물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식민지 시기 조선 천주교회의 연옥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비천주교 신자로서 죽은 영혼도 위령 미사의 효력을 입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일반적인 규칙과, 『경향잡지』에 실린 행사 소식에 관한 기사에 나오는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로부터 아래의 네 가지 사항 정도로 그 윤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미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애국 의례(개식사, 일장기 게양,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합창, 皇居 遙拜, 皇國臣民의 誓詞 제창 등)를 성당 밖에서 진행했다.[19]

둘째, 특별 미사라고 해서 천주교 미사의 보편적인 절차를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두 축으로 하고 ① 입당송, ② 참회, ③ 영광송, ④ 말씀의 전례, ⑤ 성찬의 전례, ⑥ 강복, ⑦ 파견의 순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미사 구조는 천주교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하지만 미사에 사용되는 경문과 기도문의 내용과 찬송가, 강론의 내용에서 특별 미사의 성격과 의미를 담는 형식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일제의 중국 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기도문이나 강론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도문과 관련해 보자면, 특히 1942년부터는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의 명의로 소위 '대동아전쟁 기구문'이라는 기도문이 작성되어 각 교회에 배포되었으며, 성무 일과에서 이를 합송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졌다.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민의 구원자이신 천주여
> 이제 대동아 건설을 목표로 하고 매진하는
> 우리나라에 강복하시며
> 우리나라에서 나신 성인 성녀들은
> 우리 기구를 전달하사 하여금

---

19) 경성교구의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주교는 파리 외방 전교회 본부에 보낸 1938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당 입구에 국기 게양대를 세우고 당국의 지시를 따라 그 앞에서 경례 선서 등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경일과 일정한 날에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천황의 지향에 따라 공동 기도를 드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 날에는 일본 군대와 전쟁의 희생자들을 도와 주기 위해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새로운 조처가 교회 안에 좀 동요를 일으켰습니다만, 점점 그 지시들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역, 『서울교구연보(II) 1904~ 1938』(명동천주교회, 1987), 287 쪽.

제일선에 나선 장병들에게는 무운이 날로날로 혁혁하게 하여주시고
銃後를 지키는 우리에게는
억조일심으로 각기 직역봉공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一死報國하려는 결심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욱 치성케 하여서
하루라도 속히
대동아 영원한 평화를 확립케 하시고
따라서 세계가 평화한 중에 주의 성명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천주경, 성모경 각 3번)
(매일 각 성당에서는 미사 끝에 신부 교우들과 다같이 염하고 각 가정에서는
모든 교우들이 早課나 晩課 끝에 염할 것)[20]

넷째, 미사가 끝난 후에는 성당 내에서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전몰 장병 유가족을 위로하는 방문 행사 등을 벌였다.[21]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된 위령 미사와 기원 미사는 어떤 의미 구조를 지니며, 또한 일제의 황민화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

첫째, 한편으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인류의 구원을 기원하는 천주교의 종교 의례인 미사의 구조 속에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전사자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통합시킴으로써 국가주의를 종교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 전사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삶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죽음의 초월적 의미를 각인시킴으로써 현세적 불안에 대한 탈출구를 제공해 주었지만 이와 더불어 탈현세적 신앙관을 유포하기도 했다.

둘째, 사회적으로는 죽음을 애도하고 기념하는 의례를 통해 영국과 미국 등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아시아의 이미지를 유포함으로써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반서양 의식을 극대화했다. 특히 위에서 소개한 '대동아전쟁 기구문'에도 나타나듯이, 이 땅의 평화를 깨뜨린 장본인은 바로 영미 제국주의자들이며, 태평양전쟁은 바로 이 백인 침략자들을 응징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영원한

20) 「국민총력, 대동아전쟁기구문」, 『경향잡지』, 1942 년3 월15 일
21) 「목포에 국가를 위한 미사성제」, 『경향잡지』, 1938년 4 월 15 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쟁인 태평양전쟁은 정의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의의 전쟁에 동참하는 아시아인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죽더라도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셋째, 총독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천주교회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일본 정신에 걸맞는 종교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조선 천주교회는 일제시기 후반에 접어들어서도 1910년대에 비해 그다지 크게 교세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22] 따라서 불교나 개신교와 같은 타종교, 그리고 사회주의와 같은 근대 사상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총독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므로 조선 천주교회가 이처럼 각종 애국행사를 자발적으로 전개한 것은 조선총독부라는 식민 권력 당국의 우호적인 협조를 얻어 교세 확장의 기회를 삼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Ⅲ. 동양 문화에 대한 재인식

1. 神社 參拜의 허용

조선 천주교회는 전래된 초기부터 조상 제사 문제를 놓고 조선 정부와 계속 갈등 관계를 이루었다. 개항기와 일제 초기까지도 천주교회측은 아시아 지역의 고유한 토착 문화, 특히 조상 제사를 비롯한 여러 의례에 대해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당연히 조선 천주교회는 일제가 강요한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미신 또는 이단으로 인식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1923년에 발행된 『서울 교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는 제22항에서 "신사 참배를 하거나 신사에서 행해지는 예식들에 참석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지향이든 간에 금지된다"고 못박고 있었다. 또한 1925 년에 간행된 『天主敎

22) 실제로 당시 천주교회의 신자수는 1910년의 73,517명에서 1920년의 89,333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이후 15년 동안 완만히 증가해 1936년에는 149,732명을 기록하는 정도였다. 윤선자,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의 대응」(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7), 55, 114, 238쪽

要理』 제1판[23]에서도 "일본 예절로 말하더라도 신사 참배라는 것은 확실히 이단이니 아조 금하는 것이오…"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193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담아 1932년에 작성한 『조선 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의 제466항에서도 "신사에서 행해지는 예식들에 참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지향이든 간에 금지된다"고 명시했다.[24] 그러므로 최소한 1932년 초까지 조선 천주교회가 취한 공식적인 입장은 신사 참배가 이단 혹은 미신이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해 보자면 조선보다는 일본 천주교회가 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일본 천주교회가 거부한다면 비애국적이라는 낙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향후 일본에서의 천주교 선교 활동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1932년 9월 22일에 동경대교구장 샹봉(Chambon) 대주교는 일본 문부성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어 신사 참배가 애국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문부성 당국은 8일만인 9월 30일에 '차관'의 이름으로 "학생 생도 아동을 신사에 참배시키는 것은 교육상의 이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 경우에 학생 생도 아동의 단체가 요구받는 경례는 애국심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 왔다.[25] 이 회답은 이후 일본과 조선의 천주교회가 신사 참배를 국민적인 예식의 문제로 간주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당시 무니(Mooney) 주일 교황 사절은 이 회답을 근거로 종교적 예식이 아닌 한에서 천주교 신자들도 神社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하여 머리를 숙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당시 경성 교구의 뮈텔(Mutel) 주교도 1932년 9월 30일의 문부성 차관 회답을 근거로 신사 참배를 국민 의식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것은 1932년에 나온 『천주교 요리』 제2판을 통해 확인된다. 앞서 말한 1925년의 『천주교 요리』 제1판에서는 신사 참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지만, 1932년의

23)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르 장드르(Le Gendre, 최루수) 신부가 편찬한 것이다.
24) 정동훈,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천주교회와 신사 참배에 관한 고찰」, 『교회사 연구』, 제11집 (1996), 61~62, 74쪽.
25) 위의 논문, 77쪽.

『천주교 요리』 제2판에서는 신사 참배가 국가의 한 예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격으로서는 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신사 참배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 신사 참배는 비록 그 시작은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일반의 인정과 관계 당국의 성명에 의하여 국가의 한 가지 예식으로 되어 있으니 저것과 혼동할 것이 아니며 천황 폐하의 어진 앞에 예함도 이단이 아닌즉 국민된 자 가히 행할 것이요…26)

원래 1925년의 『천주교 요리』 제1판은 編纂者와 監準者의 이름을 함께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1932년의 제2판은 원 편찬자인 르 장드르 신부가 사망한 뒤에 나온 개정판으로 '감목 민 아오스딩 監準'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신사 참배를 용인하자는 입장은 아마 당시 뮈텔 주교 개인의 견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1933년 3월에 경성에서 열린 조선 주교 회의 연례 회의에서도 무니 주일 교황 사절의 지침을 근거로 "신도이즘에 대하여 개별적인 경우의 해결을 위하여 동경에서 용인되는 실천 사항들은 조선의 지역에서도 용인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회적인 차원에서 차츰 신사 참배를 허용하려는 태도를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35년 이후가 되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신사 참배가 일본의 고유한 국가 의례로서 비종교적인 예식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 신사 참배 예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교황청의 결정 과정에는 당시 주일 교황 사절이었던 마렐라(Marella) 추기경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마렐라 추기경은 1935년 5월 8일에 신도 예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교황청 布教聖省으로 보내어,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 결정을 새로이 내려 줄 것을 청했다. 그러자 그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1936년 5월 18일 포교성성에서는 일본의 신도 의식에 대한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교령인 '플루리에

26) 위의 논문, 82쪽에서 재인용.

스 인스탄테르퀘'(Pluries Instanterque)를 발표하여 신사 참배를 인정했다. 이 교령에서 포교성성이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해서 내린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교구 직권자들은 예식의 경우 신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즉 문화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물론 앞서 반복해서 그리고 명백히 선언문들을 통하여 밝힌 바대로, 공권 기관인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운영되는 신사에서 늘 거행되는 의식들에는 조국애의 의미, 즉 황실 가족과 국가의 은인들에 대한 공적 존경의 의미만이 담긴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교구 직권자들은 이런 의식들이 순수하게 시민적인 예식의 가치만을 지닌 것이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정당한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27]

이로써 조선과 일본에서 천주교회가 오랜 동안 정부와 긴장 관계를 가지게 만든 신사 참배, 넓게 말해 神道 儀式에 참여하는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모든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사 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28] 그런데 사실 교황청 포교성성의 공식 교령이 나오기 1개월 전에 이미 『경향잡지』에는 신사 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식이라고 명시하고 참배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조선과 일본 천주교회는 교황청의 공식적인 교령이 발표되기 전에도 마렐라 추기경과의 교감 속에서 신사 참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황청이 발표한 교령은 일본 천주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교령을 확대 해석한 결과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29]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로마 교황청이 1911년 대구 교구를 설정하면서부터 이미 조선을 일본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한 교령이 조선 천주교회에 적용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지적도 있다.[30]

---

27) 위의 논문, 103~104쪽에서 재인용.

28) 하지만 당시 평양 지목구를 관할하고 있던 미국의 메리놀회 소속 천주교 선교사들은 1936년 포교성성의 교령이 나오기 전까지 신사 참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29) 정동훈, 앞의 논문, 106쪽.

2. 조상 제사 금지의 완화

일제 말엽에 들어와서 조선 천주교회가 동양의 전통 문화를 재인식하기 시작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조상 제사에 대한 태도 변경이었다. 사실상 조상 제사를 포함한 소위 '中國 禮式'에 관한 문제의 기원은 멀리 17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31] 당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예수회는 適應主義 宣敎政策과 補儒論的인 입장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예수회보다 반세기 뒤에 들어온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선교전략을 영합주의(syncretism)라 비난하면서 조상 숭배와 공자 공경 의식을 미신적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서 촉발된 논쟁은 약 1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결국 교황 글레멘스 11세는 1715년 3월 19일 칙서 '엑스 일라 디에'(Ex illa die)에서 공자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는 등 중국 예식에 대한 금지령을 발표했다. 즉 그리스도교 신의 명칭으로는 천주 이외에 天이나 上帝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조상숭배와 공자 공경 의식을 금하며, 또한 조상의 위패도 금하나 다만 신위라는 글자 없이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것만은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교황 베네딕도 14세는 1742년 7월 11일 결정적인 칙서 '엑스 쿠오 싱굴라리'(Ex quo singulari)를 통해 글레멘스 11세의 칙서를 재천명하고, 중국 예식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동양 지역으로 파견되는 모든 유럽인 선교사에게 칙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명했다.

로마 교황청이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던 의례 문화인 조상 제사와 공자 숭배 의식을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중국과 조선 및 일본 등 유교 문화권에서는 천주교 선교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인 천주교 선교사들은 이들 나라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해당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 조선에서도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無父無君의 異端邪說을 추종하는 무리로 몰려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것이다.

---

30) 윤선자, 「일본 군국주의 종교정책과 조선 천주교회의 신사참배」, 『한국사연구』, 98 집(1997), 158 쪽.

31) 17세기와 18세기 교황청의 선교 정책과 중국 예식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최기복 「조상 제사 문제와 한국 천주교회」, 『민족사와 교회사』(2000), 76~ 83 쪽을 참조.

이처럼 수세기에 걸쳐 로마 교황청과 동아시아 지역의 천주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상 제사의 우상 숭배 논쟁과 이에 대한 교황의 금지령은 신사 참배를 허용하는 포교성성의 교령이 나온지 3년만인 1939년에 와서 비로소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즉 로마 교황청은 1939년 12월 8일에 흔히 '중국 예식에 관한 교서'라고 불리는 교서를 발표했는데, 이 교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 중국예식과 그에 대한 서약에 관하야.
> 극동 여러 지방에 어떤 예식 등은 비록 예전에 外敎 禮式에 관련되어 있었으나 시대의 지남을 따라 사람들의 풍속이 변하여지고 정신도 변하여진 현대에 와서는 한갓 조상들에게 효성을, 국가에게 사랑을, 동포에게 예모를 표시함에 불과한 민간적 예식이 되었음은 명백하다.
> 이에 동 의원들은 여러 가지 증명을 깊이 헤아려보고 지혜있는 자와 경험있는 자의 의견을 자세히 살핀 후 아래의 사항을 성명하기로 합의하였다.
> 1. 중국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는 임의로 선택하야 신봉할 수 있으며 종교적 사항에 대한 법률이나 제령을 발할 의사는 정부에게 없다는 것, 따라서 공자를 존경하는 의미로 관청에서 행하거나 명하는 예식 등은 종교적 공경을 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니오 다만 유명한 인물에 대한 존경과 祖先들의 끼친 바에 대한 경의를 품고 또 표시하기 위한 목적뿐임을 여러번 또는 명백히 성명하였으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공자의 기념당이나 학교에서 공자의 모상이나 위패 앞에 거행되는 존경행사에 참예함이 가하다.
> 2. 그러므로 공자의 모상이나 그의 이름이 기록된 위패까지라도 가톨릭 학교 안에, 더구나 관청에서 명하면, 이를 모시거나 머리를 숙여 경례함을 불가하다고 여기지 말 것이라. 만일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가톨릭자들의 바른 지향을 열어 밝힐 것이다.
> 3. 가톨릭신자인 관리나 학생들이 만일 공식으로 거행되는 예식에 참예하게 되면 교회법전 1258조를 따라 수동적으로 지내고 또 순전한 민간적 예식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바 행동이나 조력을 할만하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만일 필요하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야 자기 바른 지향을 성명할 것이다.
> 4. 시체나 죽은 이의 모상 앞에 또는 죽은 이의 단순한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 숙임과 또는 기타 민간적 예모를 표시함은 가한 줄로 여길 것이다.[32]

이 교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극동 지방의 일부 예식이 예전에는 종교적인 것이었지만 현대에 와서 효성과 사랑과 예모를 표시하는 민간적인 예식으로 변했다고 규정한 점, 공자에게 바치는 숭경 의식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점, 그리고 죽은 이의 모상이나 위패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다고 허용한 점 등이다. 교황청이 이런 교서를 내리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양 문화에 대한 교황청의 시각 변화와 선교 정책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1919년에 교황 베네딕도 15세가 회칙 '막시뭄 일루드'(Maximum illud)를 반포해 선교지에서의 현지인 사제 양성과 교계 제도의 토착화를 역설한 이래 교황청과 세계의 지역 천주교회에서는 토착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1920년대에 와서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중국인과 일본인 사제들이 주교로 임명되어 현지인 성직자가 교구를 위임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33]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자면, 1939년에 발표된 '중국 예식에 관한 교서'도 역시 교황청이 종래의 공격적인 정복 위주의 선교 정책을 벗어나 선교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깊이 이해하는 적응주의적 선교 정책으로 그 기조를 변경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1939년 조상 제사에 관한 교황청의 교서는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34] 즉 조상 제사의 허용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자 공경 의례의 전면 허용일 뿐이며, 유교 문화권에서 이해하는 조상 제사와는 거의 무관한 내용이었으므로 현지 신자들과 선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소개한 교서의 내용 가운데 조상 제사에 관한 사항은 이미 1704년과 1742년에 발표한 교황의 칙서에서도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이의 이름만 쓰는 위패는 허용된다는 규정은 1704년 칙서에 이미 담겨 있었다. 그리고 죽은 이에게 절을 하고, 시체나 죽은 이의 이름만 적힌 위패나 묘지 앞에서 향을 피우고 음식을 진설하는 행위는 1742년 칙서에서 허용된 사항이었다. 그러므로 1939년 중국 예식에 관한 교서의 내용이 공자 공경 의례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

32) 「중국 예식에 관한 교서」, 『경향잡지』, 1940년 2월 15일

33) 최기복, 「한국 전통 문화와 천주교회의 충돌」,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80~82쪽.

34) 윤선자, 「1930년대 조선 천주교회와 교황청의 중국의례 허용 훈령」, 『사학연구』, 55·56 합집호(1998), 804~805, 811쪽.

하지만 이 교서가 조상 제사 문제에 관해서 부분적인 허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시기를 전후해 교황청과 조선 천주교회에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의례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났다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선과 일본 천주교회의 신사 참배 용인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렐라 추기경은 신사 참배 문제를 거론하면서 동양의 전통적인 의례 생활 일반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일반 사교상 예컨대 葬式, 結婚式, 기타 사사로운 의식이 거행될 때에 설령 그것이 본시는 다른 종교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오늘에 있어서는 유식자 간에 종교적 의의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톨릭 신자도 다른 사람과 같이 거기에 참예하여 무방하다"는 통첩을 내려 아시아 지역에서 토착 문화에 입각한 의례들을 용인할 의사를 보였다.[35] 물론 이 소책자는 일본 천주교회에 보내는 글이었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한 연구의 지적대로[36] 당시 교황청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 곧 일본의 제국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회에도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는 통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마렐라 추기경의 글이 당시 조선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교계 잡지였던 『경향잡지』에 실렸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와서 조선 천주교회가 조선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경향잡지』에 자주 등장한다. 이 기사들 속에서 조선 천주교회는 이전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 문화와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의례 생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조선 천주교회에서는 천주교 신자로서 각종 비천주교적인 예식에 참석할 경우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재규정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령 결혼식을 예로 들어 보자. 1937년 8월 15일자 『경향잡지』의 「질문 해답」란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전통적인 혼례 방식대로 결혼식을 거행할 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7] 즉 천주교 신자가 세속 예

35) 「교황사절이 보내는 소책자」, 『경향잡지』, 1937년 2월 28일
36) 윤선자, 앞의 논문(1997), 158쪽
37) 「질문 해답: 세속 결혼식에서 전안과 초례」, 『경향잡지』, 1937년 8월 15일.

식으로 결혼식을 할 때 奠雁과 醮禮를 행해도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 전안례는 안 되지만 초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안례의 경우 첫째, 그 설명이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분분한 해설 가운데 하나도 안심하고 신용할 만한 해설이 없고, 둘째, 천주교인은 먼저 천주 대전에서 혼례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며, 셋째, 예전의 까다로운 풍속과 전례를 폐지해 나가는 때이므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상에 아무 어려운 문제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초례에 대해서는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결혼의 예절이므로 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의 받침이 되는 것은 "무슨 행동이 당초에는 무슨 이단이나 미신의 뜻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로 그 뜻을 완전히 저버려 그것은 상관치 아니하고 다만 풍속과 관습이 된 경우에는 교우들도 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천주교회는 신사 참배 용인과 더불어 조상 제사를 허용하게 되었고, 나아가 혼례, 상례 등 각종 전통 의례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천주교회가 선교 지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에 열린 제2 차 바타칸 공의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에서 천주교회가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토착화된 상례, 제례의 시안을 작성한 것도 겨우 1994년에 와서야 시작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전체 한국 천주교회사의 흐름에서 볼 때 선교 지역의 문화적 관행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입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지역 사회에 뿌리박은 토착 문화를 재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일제 말기의 전시 동원 체제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히도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 천주교회가 국가 이데올로기와 유착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조선 천주교회의 중요한 문화적 에토스로 자리잡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조선 천주교회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재인식은 아무런 비판적 성찰이나 재조명도 없이 주변적인 역사로 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Ⅳ. 순교자 현양 운동과 聖戰의 촉구

중일전쟁이 발발한 2년 후인 1939년은 己亥敎難(1839)이 있은 지 백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1937년 말부터 조선 천주교회는 1925년에 福者位에 오른 79위[38]를 비롯한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순교자 현양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이미 1937년 11월 30일자 『경향잡지』 사설에서 순교비의 건립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 조선 천주교회는 1938년과 1939년에 걸쳐 순교비 건립을 위해 성금을 접수하고, 각종 순교자 현양 행사를 권장했다. 1939년 6월 15일자 『경향잡지』에서는 충남 서산군 해미와 황해도 구월산을 순례한 기록들이 실리며, 동잡지 1939년 9월 15일자에는 되재 지방에서 지방 교회의 차원으로 순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는 보도가 실리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중세 유럽의 장원에 맞먹는 규모를 자랑했다는 함경남도 덕원의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순교 백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도 했다.

이처럼 1937년부터 시작된 순교자 현양 운동은 조선 천주교회의 뿌리 찾기 운동 내지는 정체성 확립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순수한 종교적인 기념 행사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정세는 일제가 한창 전시체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천주교회로서도 당국의 시책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순교자 현양 운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순교자 현양 운동은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1931년의 조선 교구 설정 백주년과 1939년의 기해교난 백주년을 맞으면서 조선 천주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출발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해야 한다는 관념을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조선 천주교회가 벌인 순교자 현양 운동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성격과 교회 내적인 성격을 차례로 검토해 보자.

1. 순교자 현양과 聖戰의 논리

먼저 조선 천주교회가 순교자 현양 운동을 어떤 논리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향잡지』의 한 사설에서는 조선 천주교회가 순교자 현양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순교비의 건립을 당시 남산에 건립 중이던 國民誓詞塔이나 상

38) 79위 복자는 己亥敎難 순교자 70명과 丙午敎難 순교자 9명으로, 1925년 7월 5일에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식이 거행되었다.

해와 만주 지역에 세워진 전몰 일본군 표충탑 및 위령탑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장차 경성 남산 우혜는 공비 10만원의 국민서사탑이 건축되리라 하고 상해부근 大場鎭(일지양군의 격전지이니 황군이 악전고투하여 여기서 승전한 결과로 용이하게 상해를 함락시켰다함)에는 이미 공비 5 만원의 표충탑이 높이 솟아있는데 이 건립비는 황국군인들이 동료들의 충용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부 자담한 것이라 하고 通州(작년 7월 29일에 황군 장병 20여명과 내선동포 2 백명이 중국폭도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곳)에는 공비 10 만원의 위령탑이 건립되리라 합니다.…우리가 세울 순교기념탑도 조선 치명자들의 그 장렬한 순교행동을 만대에 전하여 현양할 것이오 이를 바라보는 자는 조선 치명자들의 그 송죽같은 절개와 가톨릭의 숭엄한 순교정신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겠나이다.[39]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조선 천주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순교비 건립을 당시 서울 남산에 세우고 있던 국민서사탑이나 상해의 중일전쟁 표충탑 또는 만주의 전몰 일본군 위령탑의 건립과 동일한 것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논지상으로 보자면, 조선 천주교회는 조선의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 순교 정신을 기리는 것이 중일전쟁 당시 애국적인 일념으로 참전해 전사한 일본군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순교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 천주교회에서는 행여나 총독부 당국이 순교자 현양 운동을 반일 민족운동으로 이해하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상전시체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대중적인 행사를 벌이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총독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향잡지』에서는 순교자 현양 운동이 민족 운동과는 무관하며 순수하게 종교적인 행사이고, 조선 천주교회는 언제나 총독부 당국의 시책에 잘 따랐음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

39) 「순교비 건립에 대하여 16만 교형자매께 아뢰는 말씀」, 『경향잡지』, 1938년 12월 31일

> 우리 순교자들을 현양하자는 운동은 혹시 가슴 속에 숨은 민족사상이 어느 모양으로 나타남이나 아닌가하여 염려스러운 눈을 굴릴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순교자 연양운동 선상에 선뜻 나서기를 꺼리는 자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조선과 같은 전교지방에 있는 가톨릭교회는 모든 민족사상 정치사상 등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으라는 것은 역대 교황께서 엄중히 명령하신 바이오 전교지방 모든 주교 신부가 양심상 책임을 지고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이며 본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누구보다도 철저한 각오를 가지고 주의를 게을리 아니하는 바이니 이는 본 잡지의 30여년간 장구한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오 조선사회 다른 어느 신문잡지보다도 본 경향잡지가 당국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음을 보아도 능히 알만한 것이다.…첫째, 순교자는 이 세상 민족문제나 정치문제로 인하여 죽은 자가 결코 아니오 다만 이 세속을 초월한 가톨릭교의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한 자이다.…둘째, 이론보다도 사실을 들어보면 우리 조선 순교자 중에는 국적과 민족으로 불란서에 속하였던 3위 주교, 10위 신부와 중국에 속하였던 1 위 신부가 계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40]

「우리 순교자 현양과 민족 사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사설에 따르면, 조선의 천주교회는 언제나 모든 민족 사상이나 정치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있는 입장이며, 『경향잡지』도 이런 정교 분리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해 왔기 때문에 총독부 당국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천주교회가 추진하는 순교자 현양 운동이라는 것도 종교적인 진리를 위해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이며, 또 조선인 순교자뿐만 아니라 프랑스인 선교사나 중국인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일 민족 사상을 유포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행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이 이 순교자 현양 운동에 대해 계속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던 모양인지, 『경향잡지』에서는 순교자 현양과 종교 보국이 일치함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들이 계속 제시되었다. 1939년 3월 30일자 『경향잡지』의 사설 「우리 순교자를 선전하라」에서는① 서구 사조의 유입으로 동양 정신이 붕괴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조선 천주교회의 전통적인 순교 정신이 필요하다는 주

40) 「우리 순교자 현양과 민족사상」, 『경향잡지』, 1939년 3월 15일

장과 ②현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종교 단체들이 무수히 난무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초개처럼 버리는 순교 정신으로 무장한 천주교야말로 진정한 종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현금 인간 생활은 점점 복잡하여짐에 따라 영혼을 생각할 여유는 적어지고 물질문명만 급속도로 발달되어 나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은 유약해지는 반면에 전에 없던 좋지 못한 사상과 주의가 외국으로부터 침입하여 동양의 윤리관념을 파괴하려 하며 육신의 쾌락만 돕는 여러 가지 시설과 유행이 늘어가므로 이런 시대에 있어 모든 유혹을 단연 물리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받은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초개처럼 버리는 저 용감한 순교 정신이 필요하다.
>
> 지금 조선에는 현세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수한 유사종교단체가 잠동하고 있고 또 소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파들도 현대사조에 휩쓸려 점점 세속적으로 동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은‘ 종교라는 것은 현세의 어느 목적을 도모하는 것, 정신 수양을 하는 단체, 일시적 무슨 위안이나 얻어 보려는 단체, 서로 신성한 교제나 맺고 지내자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금 일반의 보편적 현상이다. 이 따위 종교적 견해로 신경이 마비된 이 땅의 민중에게는 칼을 맞고 쓰러진 우리 순교 조상들의 시체 전신에 가득한 극형의 자취를 일일이 가리켜 가면서 순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땅에 약 1만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라. 그러면 인간의 가장 깊은 생명욕을 꿰뚫고 있는 가톨릭 신앙이 진리 아닐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41)

그리고 또 다른 사설에서는 순교자 현양 운동을 조상 숭배의 정신, 나아가 ‘皇道 精神’의 함양으로 귀결시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조선 천주교회가 순교자들을 특별히 열심히 공경하는 것은 총독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祖先 숭배의 정신과도 일치하고, 시대의 조류에도 부합하는 바이기 때문에 황도 정신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명치유신이래 일본에도 구미 물질문명이 밀려들어와 사대주의, 영미 제국주의를 숭배하는 사조가 범람해 나쁜 풍속이 퍼졌을 때 일본 정부가 그 폐해를 시정한 것을 본받아 바로 우리 순교자를 현

41) 「우리 순교자를 선전하라」, 『경향잡지』, 1939년 3월 30일

양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는 宗敎 報國이라는 주장이었다.[42] 그러므로 순교 정신의 실천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일본군의 군인 정신을 본받아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었던 것이다.[43]

2. 순교자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조선 천주교회의 정체성

천주교회측의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순교비를 건립하려던 계획은 총독부의 제지로 무산되었고, 백주년 기념 사업으로 준비했던 『조선 가톨릭사 소고』와 『순교자 약전』도 형편상 출간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었던 순교자 현양 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천주교회로서는 각종 순교 사적을 수집하고 순교자에 대한 문헌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복원하고 정통성의 초석을 놓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일제 말엽 조선 천주교회가 추진했던 순교자 현양 운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상징적 기제로 활용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시간과 공간, 인과관계 등에 따라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서 특정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殉敎史가 만들어질 때, 이 역사는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이미지로 전화해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는 준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는 조선 천주교회의 자기 정체성과 지속성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조선 천주교회에서는 순교자의 행적을 대할 때 “이것을 한가지 예전에 된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로 할 것이 아니오, 마치 지금 우리 눈 앞에 되는 참상을 바라봄같이 할 것이요, 마치 지금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참상을 겪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44] 또한 순교자 현양 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

42) 「완고한 사상을 버리라」, 『경향잡지』, 1939년 9월 30일

43) 김정송, 「일제하 민족 문제와 가톨릭 교회의 위상」, 『교회사연구』 제11집(1996), 124쪽.

44) 「우리 순교 祖先들이 당한 죽음」, 『경향잡지』, 1939년 6월 30일

제시되었던 다양한 언설들은 조선 순교자들의 죽음을 '옥중 치명', '백지 치명', '장하 치명', '교수 치명', '참수 치명', '구덩이 치명'이라는 이름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순교 자체를 이미지로 만들어 천주교 신자들의 기억 속에 내면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즉 이미지로서의 조선 순교자들의 죽음은 조선 천주교 신자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적 현실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일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칼이 잘 들고 칼을 쓰는 희광이가 정신이 똑독하고 마음이 좋으면 단번에 목이 떨어질 수도 있었겠지마는 대개는 이러한 다행을 얻지 못하였나니 나무자루 끝에 박힌 칼은 날이 무디어져서 아마 지금 농가에서 오래 사용한 삽날보다 결코 더 날카롭지 못하였고 희광이는 술에 취하야 정신이 혼미한 중 칼을 들어 순교자의 목을 향하야 한 두번 나려치고는 그 주위로 돌며 구경꾼에게 돈을 청하고 다시 몇번 치고는 또 그렇게 하였다. 그럴 때마다 칼맞은 자리에서 뿜어나오는 붉은 피는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바쁜 듯 맥박이 뛰노는 몸뚱어리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4, 5차 7, 8차 혹은 10여 차에 가서야 머리가 완전히 동체에서 떨어져 땅에 글렀나니 이왕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한번은 죽고 말진대 이렇게 자기 생명을 희생함으로 천주를 만유 위에 사랑함을 증명하면서 죽어 넘어지는 것은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랴![45]

그리하여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은 바로 교회에의 충성과 희생, 인내가 조선 천주교회의 역사이며 전통임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순교자의 기록은 당시 발생하던 신종교나 기타 종교들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종교적 우열을 가름하는 잣대로 설정되었다. 즉 순교자가 많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보다 더 신앙심이 돈독한 우수한 종교이며, 그런 순교자의 후손인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진정한 종교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 천주교회가 이 시기에 형성하기 시작한 순교자적 전통은 민족의 고난을 온 몸으로 함께 하는 민족사적 입장에서의 순교자적 전통으로 승화되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45) 위의 글.

전쟁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협력하는 전쟁 협력의 논리로 변질되어 버린 측면도 아울러 존재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일제 강점기, 특히 1937년 이후 전시 동원 체제 아래 조선 천주교회가 행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살펴보았다. 당시 조선 천주교회가 해결해야 했던 과제는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내적으로는 지나간 전통의 역사를 복원하고 내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선 천주교회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천주교 특유의 전례 운동을 주요한 통로로 활용했다. 이 때문에 조선 천주교회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중일전쟁을 찬양하고 전몰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각종 위령 미사와 기원 미사를 활발히 거행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제가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들에게 강요한 신사 참배에 대해서 조선 천주교회는 국민적인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고, 조선인 신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권장했다. 또한 전래 초기부터 극단적인 거부로 탄압을 자초했던 조상 제사에 관한 금지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혼례와 같은 전통적인 의례 문화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조선 후기에 천주교회가 전래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의 전통적인 문화 관습과 마찰을 빚어 온 것을 반성하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조선 천주교회의 토착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반서양주의의 분위기 하에서 동양의 문화 전통을 강조하면서 일제가 부르짖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함몰될 위험성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1937년부터는 조선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기관지 『경향잡지』를 통해 순교자 현양 행사와 순교비 건립 등 순교자 현양 운동이 조선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조선 천주교회가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의 힘을 모아 사회적인 기반을 넓히고 내부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로부터 반일 민족 운동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순수하게 종교적인 의미

만을 지닌 행사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자 현양 운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하지만 『경향잡지』는 순교자 현양 운동이 반일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순교 정신이 애국주의, 일제의 전쟁 협력, 황도 정신 구현에 도움을 준다는 논조의 글을 일제의 패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역사와 조선 천주교회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말았다.

참고문헌

김정송, 「일제하 민족 문제와 가톨릭 교회의 위상」, 『교회사연구』, 11 집(1996), 109~ 147 쪽.

문규현, 『한국천주교회사 I 』, 광주: 빛두레, 1994.

윤선자, 「1930년대 조선 천주교회와 교황청의 중국의례 허용 훈령」, 『사학연구』, 55· 56합호(1998), 791~814 쪽.

윤선자, 「일본 군국주의 종교정책과 조선 천주교회의 신사참배」, 『한국사연구』, 98집(1997), 141~161 쪽.

윤선자,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의 대응」,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자크 르 고프, 『연옥의 탄생』,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정동훈,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천주교회와 신사 참배에 관한 고찰」, 『교회사 연구』, 11 집(1996), 59~107 쪽.

최기복, 「조상 제사 문제와 한국 천주교회」, 『민족사와 교회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65~106 쪽.

최기복, 「한국 전통 문화와 천주교회의 충돌」,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50 ~92 쪽

필립 아리에스, 『죽음 앞에 선 인간』, 서울: 동문선, 199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역, 『서울교구연보(II) 1904~1938』, 서울: 명동천주교회, 1987.

주요어

조선 천주교회, 기원 미사, 위령 미사, 신사 참배, 의례 문화, 순교자 현양 운동